

민평당 도당, 1차 공천자 63명 확정 발표

익산 정현을·남원 강동원·김제 정성주 확정... 전주시장·군산시장·정읍시장·부안 광역의원 유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희 국회의원, 이하 공관위)가 6.13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7명과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43명 1차 공천자 63명을 발표했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12일까지 공천신청을 한 후보자 71명을 대상으로 18일 자격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공천 확정자를 의결하고, 전주시장과 미등록 선거구에 대한 추가 공모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모안도 의결했다.

이번 확정된 단체장은 익산 정현을 현 시장, 남원 강동원 전 국회의원, 김제 정성주 전 시의장, 완주 박재완 전 도의원, 순창 홍승채 전 서울시의원, 고창 유기상 전 익산부시장, 부안 김상곤 한국유체생산자연합회전국회장이며, 경선 예정인 군산과 정읍은 유보됐다.

김종희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깨끗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평화당 전북도당 단체장, 광역의원 공천자 명단이다.

◇기초단체장
 ▲익산시장 정현을 ▲남원시장 강동원 ▲김제시장 정성주 ▲완주군수 박재완 ▲

순창군수 홍승채 ▲고창군수 유기상 ▲부안군수 김상곤

◇광역의원
 ▲전주 2 이도영 ▲전주 3 김종철 ▲전주 4 최명철 ▲전주 6 김상휘 ▲전주 8 김종담 ▲전주 10 하대성 ▲전주 11 윤중조 ▲정읍 1 고영규 ▲정읍 2 황해숙 ▲김제 1 장덕상 ▲김제 2 임영택 ▲무주 박우만 ▲고창 2 안중선 /김진성 기자

남북회담 공식수행원 확정

임종석·정의용·서훈·조명균·송영무·강경화

오는 27일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할 남북 공식수행원 6명이 확정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쪽에서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앉을지에 따라 남북도 거기에 맞춰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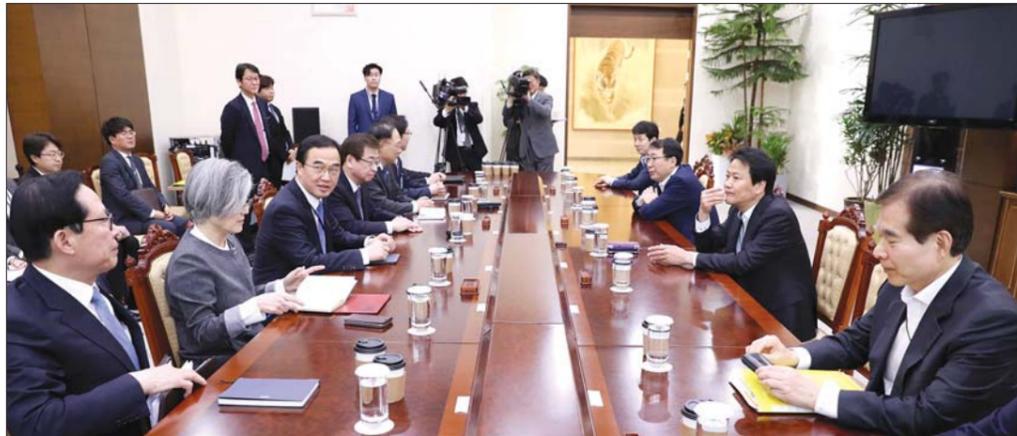
민주당 남원시장 이환주 임실군수 전상두 후보 확정

이환주 현 남원시장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19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남원시장 후보로 이환주 현 시장이, 임실군수 후보로는 전상두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경선에서 총 39.17%를 얻어 윤승호 예비후보와 이상현 예비후보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임실군수 후보로 확정된 전상두 후보는 한병락 후보와 박성수 후보를 이겼다. /김진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강행... "모든 의혹 조사하라"

꽤 이른 조차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김 의원 측과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연 끝에 출마를 강행하기로 결정. 오후 4시30분께야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종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예정됐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취소하고 서울로 와 많은 분들과 상의했다"며 "이유는 단 하나, 한 시가 급한 국정과 위기에 처한 경남을 더 이상 저와 연관된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정쟁의 늪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보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다"며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달라. 대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해달라. 더 이상 국민의 삶, 청년 일자리를 불모로 삼지말아달라.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장애인 유권자 모의투표 체험 행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9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장애인 유권자 대상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유권자에게 모의 투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과정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 투표 체험장은 실제와 동일한 모의 사전투표소로 설치, 본인여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투표함 투입 등 투표 절차별로 체험을 진행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모의 투표 체험을 하고 투표 절차·방법 및 특수형 기표용구 세트 등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각종 용구·용품 등을 시연했다.

한편,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장애인 유권자들도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이정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66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며 "대다수 국내의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장인 양승동 KBS사장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적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현대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협회장 이병규 문화일보 대표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신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언론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의 목표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홍,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23일까지 처리해야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올 것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면서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